2013. 10. 11 발행

사회진보연대 주간 소식지

# 사회화와 노동


| | |
|---|---|
| 발 행 |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회 |
| 문 의 | 전화 02-778-4001~2 \| FAX 02-778-4006 \| E-mail pssp@jinbo.net |
| 정기구독 신 청 |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www.pssp.org)에서 신청하시면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 [639호] **빈민이 아니라 빈곤을 철폐하자!**
  - 1017 빈곤철폐의 날에 부쳐
- [640호] **환갑 맞은 한미동맹, 대북 선제 핵공격의 의지를 드러내다**
  - 4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결과 분석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주간지 사회화와노동 639호 2013. 10. 10

# 빈민이 아니라 빈곤을 철폐하자!

## - 1017 빈곤철폐의 날에 부쳐

2013년 한국은 노인 자살률 10만 명당 평균 79.7명, 노인빈곤율 45.1%라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있다. 또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전체 국민의 상대빈곤율은 2010년 18.1%로, 국민 6명 중 1명은 빈곤한 상태이다. 암 발병 시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16%에 불과하지만 치료비를 걱정하는 사람은 31%에 달한다. 죽음의 고통보다 가난의 고통을 더 염려하며 살아야하는 현실이 UN이 정한 빈곤철폐의 날을 앞두고 있는 지금 한국사회의 현주소이다.

그러나 빈곤을 해결하고자 하는 국가의 노력은 너무나 미미하다. 노인을 위한 복지지출은 OECD평균의 1/4에 불과한 GDP 대비1.7% 수준으로 꼴찌인 멕시코의 바로 뒤를 잇고 있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는 140만 명에 불과하지만 그 사각지대는 400만 명이 넘는다.

### 파기된 복지 공약

확산되는 빈곤과 불평등, 삶의 불안은 지난 해 총선과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의 유례없는 복지 경쟁으로 나타났다. 개발과 성장, 뉴타운만 걸고 나오면 비든 빗자루든 당선된다던 옛날과는 다른 세상이 온 듯 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지 불과 8개월 만에 이 모든 공약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있다. 경제민주화는 재벌의 손에 맡겨지고, 복지공약은 나라사정상 어렵다는 말로 후퇴와 파기만을 거듭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공약파기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라는 말 한마디로 이 국면을 무마하려고 한다. 심지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인생은 잘 못 산 인생'이라며 가난에 처한 국민을 비하하고 낙인찍는 언사를 내뱉기도 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을 보면 비단 기초노령연금 뿐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복지공약 대부분이 '공수표'가 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은 가장 부담이 큰 3대 비급여 항목을 제외해 그 실효성이 낮아졌다. 의료본인부담 상한 50만원은 최하계층 의료비 상한 120만원으로 변경되었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폐지 공약은 파기되었다.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 고등학교 무상교육, 학급당 학생 수 개선 등의 예산도 전무하다. 장애인 1대 공약이었던 장애등급제 폐지 역시 그 실현가능성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

### 기초생활보장법의 개악과 빈곤층 복지 후퇴

박근혜 정부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선을 통해 수급권자를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기초생활보장법은 도리어 개악될 전망이다. 그나마 부족한 수급권을 갈가리 쪼개 혜택의 수준을 낮추고 숫자만을 일부 늘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마지막 사회안전망'이자 '전 국민의 기초생활을 권리로서 보장'하는 기초법의 취지는 완전히 해체될 것이고, 보장의 수준과 선정기준의 수준은 민주적인 절차 없이 각 부처 장관의 결정에 따라 좌지우지 될

것이다. 이들의 입맛대로 잘리고 깎이는 빈곤층 지원은 앞으로도 축소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의 기초법 개정 취지는 크게 '탈수급률 진작'과 '근로연계강화', '예산효율화'로 볼 수 있다. '탈수급하더라도 탈빈곤 할 수 없는' 현실이나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현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고, 수급자들이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니 이를 해결하자는 식이다. 이러한 사회적 낙인의 강화는 빈곤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공격하고, 빈곤을 개인의 책임이나 방종의 결과로 돌리는데 일조한다.

이미 이명박 정권 3년차부터 기초생활수급자는 급속도로 줄어들었다. 빈곤층이 줄어들어 수급자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심사강화를 통해 이뤄낸 결과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부정수급자를 적발'했고 예산을 '효율화'했다고 밝혔지만 기초생활수급권 탈락자의 연이은 죽음은 현실이 이와 다르다는 것을 세상에 알렸다.

## 자꾸만 죽어가는 가난한 이들

2012년 수급자의 사망률은 전체 사망률에 비해 5배 높다. 그 중에서도 30대 수급자의 사망률은 11배 높고, 40대는 8배, 50대는 7배 높다. 무미건조한 숫자 속에 담겨 있는 끔찍한 삶에 대해 우리는 진지하게 접근해야 한다.

지난 달 부산의 한 50대 남성 수급자가 번개탄을 피워둔 채 렌트카에서 자살했다. 그는 신장질환을 앓고 있어 정기적으로 투석을 받으면 살 수 없는 환자였다. 이혼 후 요양병원에서 홀로 살던 그는 딸이 취직했기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딸에게 매달 100만원의 병원비를 의지할 수 없었던 그는 죽음을 선택했다. 모든 국민의 기초생활을 권리로서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왜 부양의무자기준을 통해 가난한 이들을 그 가족에게 떠맡기려 하는가? 국가는 왜 가난한 이들의 가족으로 하여금 빈곤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는가?

한국사회 빈곤층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들이 가난에 처하게 된 이유는 각기 다르다. 하지만 낮은 임금, 잦은 해고 등 불안정노동과 불충분한 사회안전망이 빈곤의 공통된 원인이다. 즉, 누구나 자신이 갖고 있는 여윳돈 이상의 위기에 직면한다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이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전 국민 중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 극소수를 제외한 이들이 거리에서 장사하는 노점상이 되어, 집을 빼앗긴 철거민이 되어, 거리를 떠도는 홈리스가 되어 '불법' 인간으로 몰리고 있다. 죽음보다 가난이 무서워 죽음을 택한 이들이 하루 42.6명의 자살 인구의 일부가 되고 있다.

## 가난한 이들의 죽음의 행렬을 멈춰야 한다!

가난한 이들의 죽음을 멈추기 위해 우리는 투쟁해야 한다. 가난을 만드는 모든 원인에 맞서 투쟁하면서, 커져가는 빈부격차의 피해를 직격탄으로 맞고 있는 빈곤층의 생존권을 쟁취하는 투쟁에 연대해야 한다. 가난한 이들이 죽어가는 사회에서는 결국 아무도 안전하게 살 수 없다. 이번 10월 17일 빈곤철폐의 날에 반빈곤운동진영은 가난 때문에 죽어간 이들을 추모하며 빈곤 없는 세상을 요구하는 <빈곤 장례식>을 벌인다. 빈민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멈추고 가난한 이들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투쟁하자.

사회진보연대 주간지 사회화와노동 640호 2013. 10. 11

# 환갑 맞은 한미동맹, 대북 선제 핵공격의 의지를 드러내다

## - 4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결과 분석

지난 10월 2일,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아 서울에서 4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가 개최되었다.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 60년간의 한미동맹을 '가장 강력한 동맹'으로 평가하며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맞춤형 억제전략'을 공식화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시점 재검토 합의이다.

### 군사적 긴장 고조시키는 대북 맞춤형 억제전략

작년 44차 SCM에서 한미 양국은 유사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억제수단을 유형별로 구체화하는 '맞춤형 억제전략'의 도입에 합의했다. 이번 45차 SCM에서 '미합중국은 핵우산, 한미 양국의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방어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한미동맹의 맞춤형 억제전략 중에서 한국군이 동원하는 전력은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 발사 이전에 탐지-식별-결심-타격할 수 있는 '킬 체인'(Kill-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다. 이는 각각 북한의 핵·미사일을 발사 전과 발사 후 요격하는 시스템이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종전의 핵우산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더욱 구체화한 것이다. 기존의 핵우산 개념이 적국의 핵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이 핵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일반적인 개념이었다면,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의 군사력과 한반도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한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 전략은 북핵 위협 상황을 '위협-사용임박-사용'의 3단계로 나누고, 임박 단계에서는 한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제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전·평시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사용 위협부터 실제 사용까지의 모든 과정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한미동맹의 군사적 우위를 확고히 하려는 것이다.

나아가 이는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 편입을 위한 사전단계로 볼 수 있다.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이번 SCM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간 '상호 운용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하려면 관련국인 한·미·일이 미사일의 위치와 속도, 궤적 등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MD는 발사되기 직전, 그리고 발사 직후 몇 분 안에 미사일을 탐지·격추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실시간 정보 공유가 매우 중요하다. 이는 단순히 북한에 대한 핵억지력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MD 체계 자체의 완성을 위해서도 이러한 정보 공유 및 상호운용성 증대는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은 북한의 핵을 빌미로 잠재적 적국인 중국을 염두에 둔 MD 체계의 완성까지 노리고 있는 것이다. MD 체계는 자국에 어떠한 피해도 남기지 않고 핵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개념을 내포하며, 상대

방에 대한 선제공격의 가능성을 개방한다는 점에서 위험천만한 전략이다.

## 전작권 환수를 둘러싼 한-미 이해관계

이번 SCM의 또 다른 쟁점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시점이었다. 지난 2010년 한미 정상은 전작권 전환 시점을 당초 2012년 4월 17일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최근 북한의 3차 핵실험 등을 근거로 북한의 핵위협이 더욱 커졌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고조된 한반도 긴장 상황과 한국의 지휘 체계, 무기 보유 상황 등 전반적 준비 미비를 이유로 전작권 환수 시점을 재연기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신중한 입장이다. 최근 미국은 정부 부채한도와 관련하여 여야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연방정부 업무가 부분적으로 정지되는 등 재정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방비의 대폭 삭감이 불가피하다. 또한 미국은 2017년까지 주한미군(미 8군) 전력에 대한 전략적 유연성을 완전히 확보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전략적 유연성은 해외주둔미군재배치검토(GPR) 계획에 따라 주둔 미군을 기동타격대 성격으로 전환, 기존의 붙박이 주둔군의 형태가 아니라 특정 지역을 무력으로 필요한 시기에 타격할 수 있는 미군의 새로운 운용 형태를 지칭한다. 이는 미국의 헤게모니가 위협받는 곳에서 언제든 '선제공격' 할 수 있다는 작전 원리를 담고 있다.

이제 미국은 헤게모니 유지를 위해 통제·관리가 필요한 곳에 집중 개입하기 위한 유연성 확보를 중요하게 여긴다. 주한미군의 경우에도 한국의 안보와 북한의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전 세계 어디든 파견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며, 한국군에 대한 전작권 환수는 이러한 유연성 확보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향후 한미 양국은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전작권 환수 시기를 확정할 것이다. 한국은 북한 핵위협의 증대를 이유로 좀 더 안정적이고 확대된 미국의 핵억제력을 요구하며 전작권 환수 시기 재연기를 주장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암묵적으로 전제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허용을 포함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등을 요구할 것이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한국 정부에 요구해왔던 MD 참여와 미국산 첨단무기 구입, 주한미군주둔비 분담금 증액 등을 재연기의 조건으로 제시할 것이다.

전작권 환수는 '자주국방론자'들, 그리고 민주당과 진보진영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미국에 종속된 한국의 군사력 운용 통제권을 일정부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 하지만 앞서 확인한대로 전작권 환수가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미국 군사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고, 그에 조응하는 자주국방론이 실상 한미동맹의 강화를 전제하는 것임을 감안한다면 전작권을 조기에 환수하라는 것 자체가 평화운동의 요구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게다가 현재 한미 양국간 현안을 고려한다면 전작권 환수는 양국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오히려 전작권 환수 시점 재검토를 계기로 한미동맹의 호전적 재편이 더욱 탄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평화운동은 단순히 전작권을 예정대로 환수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의 호전적 재편에 대해 일관된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 한미동맹의 호전적 재편에 맞서 싸우자

이처럼 한미 양국은 북한 핵 위협을 근거로 양국의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MD 체계 편입을 예고하는 맞춤형 억제전략은 실상 북한에 대한 선제핵공격을 암시한 것으로,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한층 고조시킬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비핵지대화를 달성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호전성을 제어해야 한다. 미국의 MD 편입, 미국산 첨단무기 구입, 주한미군주둔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반대하는 투쟁을 펼치자. 또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와 같은 대북 선제공격 전략을 비판하고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함의하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요구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사회운동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